

국내 미디어산업 규제완화·투자확대... 글로벌 경쟁력 ↑

제12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 집중 지원
플랫폼 계약과정서 부당관행 개선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세계 미디어 공룡들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6조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이번 발전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 1조원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AI 개발도 추진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폐지하고, 이용요금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

성 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M&A(인수합병) 시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

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진행상황·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젊은 창작자, 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또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증강현실) 실감 콘텐츠 등 새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추진해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화질 변환,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화비디오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 운영해 미디어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 부당관행도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

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화상회의를 갖고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韓-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개시

디지털 장벽 완화... 韓 신기술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 신산업 교역 관한 사항 규정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요소 포함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와의 첫 디지털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화상회의를 갖고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번 협정으로 양국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한국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그동안 FTA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등 주요 국가들은 단독 형태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싱가포르가 우리의 제12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국가로, 이번 협상 개시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데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용수 기자

올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비대면 경제 견인하는 로봇산업 활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 방문
실증사업 강화·규제혁파 추진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만든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이날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2018년 기준 36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224억 달러로 연평균 58% 성장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니는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 기술 등 물류로봇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 중이다. 트위니는 그러나 로봇분야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 개념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 시장 확대에 한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0 금속산업대전'에서 한 업체가 꾸민 24시간 무인 스마트 로봇카페에서 서빙로봇이 시종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가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분야 로봇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기업 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 진행하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나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 조성하고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과 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하도록, 서비스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

받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도록 규제혁파에도 나선다. 로봇 관련 규제는 '실외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여부',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기준의 주차로봇 적용여부' 등이다.

안전·데이터·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